

● 제332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임시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
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검토보고서

2025. 9. 10.

운영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안 자 : 아이수루 의원(13명 찬성)
- 나. 제 안 일 : 2025. 8. 8.
- 다. 회 부 일 : 2025. 8. 14.
- 라. 의안번호 : 2910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기존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의회의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

- 상호결연의 원칙 및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 내용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상호결연 체결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- 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상호결연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

다. 참고사항

(1)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
(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

(3)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5. 8. 20.(수) ~ 2025. 8. 24.(일) (5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없음

2) 소관부서 의견조회 : 원안동의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최현재)

1 조례안의 개요

-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(이하, “공무국외활동 조례”라 한다.)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, “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”라 한다.)에서 불분명하던 서울특별시의회의 외국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상호결연 체결 절차의 구체화 필요성

-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.
- 상호결연은 협약 체결이라는 절차를 전제로,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의정 정보 교류 및 상호 방문 등을 하는 교류협력 활동의 한 유형임.

※ 상호결연이라는 용어는 기존 공무국외활동에 조례에서 ‘자매결연’으로 사용되었으나, 2019년 추진된 서울특별시의 인권영향평가 결과 우열을 나타내는 용어를 순화하도록 변경 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‘상호결연’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음(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7698호, 2020. 10. 5., 일부개정 및 시행)).

- 한편, 서울특별시의회는 기존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을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와 이들 조례에 따른 ‘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’을 근거로 추진해왔음.

- 이에 본 조례안은 상호결연 체결 근거와 그 절차를 별도의 조례로 구체화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외교활동으로서 상호결연을 명확히 규정해, 외교 주체로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상호결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3 조례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

가. 조례안의 구조

- 본 조례안은 전체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,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교류협력 추진시의 의장의 책무, 상호결연의 원칙, 상호결연 체결 및 취소 절차, 그밖에 상호결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행규칙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<조문체계 및 구성>

구성	주요 내용
제1조(목적)	서울시의회과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근거 마련 목적 명시
제2조(정의)	교류협력, 상호결연의 정의 규정
제3조(의장의 책무)	교류협력, 상호결연 과정에서의 의장의 책무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	상호결연에 관한 본 조례안 적용의 우선권 명시
제5조(상호결연의 원칙 등)	상호결연시 체결 과정의 유의사항 등 원칙 명시
제6조(상호결연의 체결)	상호결연 체결 절차 및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명시
제7조(상호결연의 취소)	상호결연의 취소가 필요한 상황을 규정
제8조(시행규칙)	그밖에 상호결연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위임

나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안 제1조(목적)는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결연 등 교류협력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규정함.
- 안 제2조(정의)는 정의를 통해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교류협력, 상호 결연에 대해 규정함.

- (교류협력) ‘교류협력’이란 서울특별시의회가 다양한 국외 지방의회와 각종 분야에서 교류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회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.
- (상호결연) ‘상호결연’이란 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음.
 - 기존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가 별도로 상호 결연을 정의하지 않은 채, 의회 의원들이 수행하는 공무국외활동 적용 범위의 하나로 상호결연의 체결과 관련해 활동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었으므로, 본 조례안에서 ‘협약 체결’이라는 절차를 통해 협력을 도모하는 상호결연의 정의를 구체화한 것은 바람직할 것임.

다.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안 제3조(의장의 책무)는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추진 시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고, 교류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할 의장의 책무를 규정함.
 - 이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 발전은 물론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을 추진해야 하며, 이를 통한 외교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 것임.
-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‘상호결연 체결’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공무국외활동 조례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와의 관계에서 ‘상호결연 체결’에 관하여는 본 조례안이 우선됨을 명확히 하였음.

라. 상호결연의 원칙(안 제5조)

- 안 제5조(상호결연의 원칙 등)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하고(제1항), 상호결연 체결 시의 원칙 및 유의점을 나열하였으며(제2항), 상호결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(제3항).
- 안 제5조제1항은 상호결연의 목적과 체결 근거를 두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역량 강화 목적을 강조하였음.
- 안 제5조제2항은 상호결연 시 고려사항으로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며 특히 국제적 위상의 유사성, 대등한 협력과 우호 가능성,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상호결연 체결과 교류시 이들 기준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할 것임.
- 안 제5조제3항은 교류협력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해 상호결연을 맺은 후의 제도적 정보 교환, 정책 협력, 상호방문을 통한 실질적 관계 강화 등을 도모하도록 함.

마. 상호결연의 체결 및 취소 절차(안 제6조 및 제7조)

- 안 제6조(상호결연의 체결)는 상호결연의 체결 절차를 구체화하여 상호결연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상대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체결식을 갖고 합의 문서에 서명하여야 하는 성립 원칙을 규정하였음.
 - 또한 교류협력 시에 수반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를 두어 원활한 상호결연 및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
- 안 제7조(상호결연의 취소)는 안 제6조에 따라 상호결연 체결 후 교류 단절이나 지속적 교류협력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 상호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4 종합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상호결연을 체결하고 국외 지방 의회와 교류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상호결연 체결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았던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임.
- 현재 서울특별시의회의 국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현황은 15개국 16개 도시로 향후 상호결연 체결 가능성이 있는 도시에 대한 방문 및 초청 등 대상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음.

<서울특별시의회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현황 : 15개국 16개 도시

(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국제교류 기본계획)>

연번	도시명	국가명	체결일	연번	도시명	국가명	체결일
1	뉴사우스웨일즈	호주	'96.8.28.(4대)	9	아스타나(누르술탄)	카자흐스탄	'05.5.5.(6대)
2	모스크바	러시아	'97.4.1.(4대)	10	방콕	태국	'07.11.26.(7대)
3	멕시코시티	멕시코	'97.4.16.(4대)	11	상파울루	브라질	'11.5.23.(8대)
4	양카라	튀르키예	'97.7.23.(4대)	12	비슈케크	키르기스스탄	'16.1.14.(9대)
5	바르샤바	폴란드	'97.7.29.(4대)	13	웰링턴	뉴질랜드	'18.1.18.(9대)
6	울란바타르	몽골	'97.8.27.(4대)	14	베이징	중국	'22.9.19.(11대)
7	저장성	중국	'01.3.30(5대)	15	호놀룰루	미국	'23.10.11.(11대)
8	알마티	카자흐스탄	'01.5.9.(5대)	16	하노이	베트남	'23.12.18.(11대)

- 그러나,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 「서울특별시 도시외교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협정도시와 서울 특별시의회가 체결한 상호결연 도시의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음.
 - 본 조례안의 시행 이후로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상호결연도시를 명확히 구분하여 의회 중심의 독자적 외교 채널을 제도화하도록 힘쓰고 이를 시민에게 명확히 구분해 알려야 할 것임.
- ※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상에는 해외 교류도시로 총 26 개국 33개 도시를 설명하고 있는데, 이는 서울특별시 친선도시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의회 간 교류협력 양해각서 교환이나 의회 간 협력 의향서 교환 정도의 불분명한 교류 형태도 포함하고 있음.
- 관련하여,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제정조례안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의회가 국외 지방의회와 상호결연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 제정조례안에 따라 상호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, 향후 본 제정조례안에 따른 공식적인 의회 간 상호결연과 그밖의 국제교류 현황을 구분해 표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.
- 결론적으로, 본 제정조례안은 상호결연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여 그간 부재했던 서울특별시의회 상호결연 체결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, 향후 상호결연 추진 시 상대 기관과의 교섭 과정에 공식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.

담당 연락처	02-2180-7688
--------	--------------